

김중연 선생님 「공무원 ONE 헌법」
제4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1-06-28)

본 정오표는 2022년 대비 「공무원 ONE 헌법」 제4판의 오탃자 정오자료이며, 변경된 내용의 추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후 변경된 법령 등은 자료실 등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2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실시될 예정으로 기본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추가 촬영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의 경우 올해 상반기 판례강의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P.80 오탃자 수정

*(기존)

1)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① 절차적 요건

(가) 헌법 제73조에 따라 ...

(나) 단,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비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항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

*(수정)

1)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① 절차적 요건

(가) 헌법 제73조에 따라 ...

(나) 단,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비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

P.119 오탈자 수정

*(기준)

참고  **게리맨더링의 의미와 그 어원**

게리맨더링의 어원은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기 멋대로 분할했고, 그 선거구의 모양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셀러맨더와 비슷한 형태여서, **게리맨더링과** 셀러맨더를 합성해 게리맨더링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런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선거구제에서 한번 만들어진 선거구를 바꿀려면 누군가는 자기 지역구를 잃어야 한다는,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리맨더링을 시도했던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런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를 뜻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

참고  **게리맨더링의 의미와 그 어원**

게리맨더링의 어원은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기 멋대로 분할했고, 그 선거구의 모양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셀러맨더와 비슷한 형태여서, **게리와** 셀러맨더를 합성해 게리맨더링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런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선거구제에서 한번 만들어진 선거구를 바꿀려면 누군가는 자기 지역구를 잃어야 한다는,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리맨더링을 시도했던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런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를 뜻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P.217 오탈자 수정

*(기준)

IV.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즉, 무엇인가를 할 자유는 물론 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요구받지 아니할 자유도 개별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 행동자유에 의해 보호된다(헌재 2019.4.11. 2017헌가28).

*(수정)

IV.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즉, 무엇인가를 할 자유는 물론 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요구받지 아니할 자유도 개별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 행동자유에 의해 보호된다(헌재 2019.4.11. 2017헌가28).

P.221 오탈자 수정

*(기존)

⑫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는 구간은 지정해제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9.24. 2014헌바291).

*(수정)

⑫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는 구간은 지정해제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9.24. 2014헌바291).

P.252 02번 문제 해설 교체

*(기존)

해설

③ (틀림) [헌재 2016.11.24. 2014헌바45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공범 간의 고소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둔 취지와는 무관한 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친고죄가 고소취소의 시한을 정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 결정들의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수정)

해설

③ (틀림) [헌재 2018.3.29. 2016헌바270] 통상의 자복만으로, 자수와 같이 범죄자가 형사법 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자복에 관하여 자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P.396 오탈자 수정

*(기존)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3단계)

(가) 3단계 제한은 주관적 사유 이외에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 내지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유는 **기본권주체의 능력과 무관한 것이므로(즉 기본권주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헌재 2004.4.25. 2001헌마614).

*(수정)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3단계)

㉞ 3단계 제한은 주관적 사유 이외에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 내지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유는 기본권주체의 능력과 무관한 것이므로(즉 기본권주체의 능력으로 극복할수 없는사유로 제한하는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헌재 2004.4.25. 2001헌마614).

P.495 오탈자 수정

*(기존)

⑤ 자녀의 양육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7.28. 2015헌마964).

*(수정)

⑤ 자녀의 양육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7.28. 2015헌마964).

P.551 오탈자 수정

*(기존)

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토론 ⇒ 소위원회 심사 보고 ⇒ 출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 순서로 심사
--------	--

*(수정)

위원회 심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토론 ⇒ 소위원회 심사 보고 ⇒ 출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 순서로 심사
--------	--

P.630 오탈자 수정

*(기존)

판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②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④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

*(수정)

판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③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

P.776 오탈자 수정

*(기존)

- 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7.5.1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마쳤는바, 이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4.26. 2017헌마397).

*(수정)

- 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7.5.1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마쳤는바, 이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4.26. 2017헌마397).